

국민연금 체납 7조... '버티기 소멸'도 4조원

사상최대액... 호남지역 체납 8,137억 달해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액이 7조2천766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가운데 호남지역 체납액도 8천13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자의 '버티기'로 징수 시효가 소멸돼 받지 못한 보험료도 4조원을 넘어섰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노용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국민연금 누적체납액은 총 7조2천766억원이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해 결국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는 7월 현재 62%인 4조800억원에 달했다.

소멸 시효는 지나지 않았으나 9월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당이득 환수금 규모도 무려 1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지역 체납액은 8천137억원으로 사업장(직장)가입자가 751억원, 지역가입자가 7천386억원을 체납했다. 이에 따라 징수율도 사업자가입자는 99.0%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77.7%에 그쳤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공단도 상대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보

함료 미납, 탈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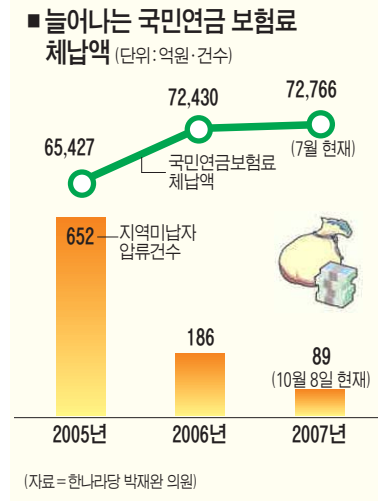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중에서 월 50만원 이하 소득을 신고한 7만8천330명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에는 월 소득이 5천700만원이라고 신고해놓고 국민연금에는 월 소득이 겨우 31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한 가입자가 있는 등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탈루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따르면 건보공단에 신고한 보수와 연금공단에 신고한 보수가 연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가입자가 24명, 5천만원~1억원 미만 차이가 나는 가입자가 53명, 3천만원~5천만원 차이가 나는 가입자가 97명 등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이상 소득을 축소 신고한 가입자만 6천457명에 달했다.

한 의원은 "일부 고소득자들이 건강보험에는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고,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 지 모르는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 아래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원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도 "국민연금 40등급 이상의 고소득 지역가입자 미납금액이 대폭 증가해 2007년 8월 현재 3천314억원으로 2004년의 1천856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병호 의원(한나라당) 역시 "의사·변호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지역가입자의 평균 신고소득이 2001년 275만 원에서 2007년 8월 현재 19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며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소득 부여를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실직... 사업중단...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광주·전남 27만6,320명

5년새 5만6,797명 늘어

참여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납부예외자'가 급증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화의원(한나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2002년 말 425만명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77만명(18%)이 증가한 502만명으로 늘었다.

납부예외자가 급증한 원인은 ▲실직 34만명 ▲사업중단 26만명 ▲휴직 11만명 등으로 전체 납부예외자 77만명중 92%인 71만명이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만3천944명이 증가해 증가율 28.7%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고, 광주도 2만2천853명이 늘어났다(22.6%) 서울과 6개 광역시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전남지역 납부예외자는 모두 27만6천320명으로 집계됐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황당한 연금공단

국민이 낸 보험료로 공단이전비용 총당 지방이전 이주직원에 이전수당 지급도

1천150억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전비용을 총당하기 위해 국민이 낸 연금보험 재정을 끌어다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을 경남 진주시로 이전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연금기금에서 총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지방이전 계획안에 따르면 공단 지방이전 비용은 사옥신축에 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은 공단 본사직원 400명에게 숙소임차비용 296억 원과 이사비용 5억 원, 이전수당 56억 원 등 총 357억 원을 연금제정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단은 직원 1인 당 매달 30만원 월을 이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과다 지원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공단은 이전비용으로 원칙적으로 공단 사옥 매각대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연금제정의 일부"라며 "지방이전을 위해 대규모의 연금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고 따졌다.

/연합뉴스

“세금 깎고 공무원수 줄여라”

재계, 차기정부 정책 제시

재계가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 정부조직 축소와 공무원수 삭감, 세금인하와 재정지출 효율제고, 규제축소, 국토종합경쟁력 제고, 교육자치 확대,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 공고화 등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선진한국을 위한 선택: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제목의 미래한국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작은 정부 지향, 국가 담당 복지 최소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등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2020년까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성장잠재력 확충, 시장경제의 확산과 정착, 공공부

문 경쟁력 제고, 안보 및 외교역량 강화의 4대 정책과제의 60개 주요 정책대안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정책 권고를 담았다.

한경원은 보고서에서 차기 정부의 5대 정책 목표로 기업, 시장, 국민, 정부, 기반 등 5개 분야의 경쟁력의 제고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10대 핵심과제로 ▲농사공동운명체 의식 회복과 R&D 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엔진 발굴 ▲수도권 및 토지이용 규제, 경제력집중 및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착 ▲시장 개방과 외국인에 대한 고용 및 사회 개방 ▲충청을 포함한 대수도 및 대영남, 대호남 등 3대 메가시티 건설을 통한 국토의 종합경쟁력 제고 ▲고교평준화 폐지, 대학의 자율성 확대, 교육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허용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니콘 포토스쿨 오세오”

광학기기 전문업체인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아마구치 노리아키 주최로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니콘 포토스쿨' 행사장에 많은 방문객들이 몰려 신제품 디지털카메라를 체험하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계속될 포토스쿨에는 김홍희·박하선씨 등 디퓨멘터리 사진작가들의 특강도 마련돼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11년 가스대란 온다

천연가스 시장 수급 악화...770만t 공급 부족

기존 천연가스 도입계약의 종료와 원활하지 못한 계약 연장으로 인해 2011년에 770만 가량의 가스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세계 천연가스시장의 수급 악화로 가스의 수급 불안정이 심각해질 전망이다이라고 같이 밝혔다.

국내에서도 천연가스 수요가 늘고 있지만 2011년이면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 천연가스 공급국과의 계약이 끝나면서 수요가 3천290만t 인데 비해 공급은 2천520만t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대로 2015년까지 타이프한 수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가 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과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러시아, 호주에 신규 가스전 계약을 통해 천연가스 물량부족을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나 협상을 통해 지난 1년 이상이 지나왔는데 아직까지 계약 성사가 불투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北 영공 통과료 83억4천만원

2002년 이후 아시아나·대한항공 지급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공 통과료로 북측에 지급한 금액이 83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 게 제출한 '국적항공사 북한 영공통과료 지불현황'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2년 이후 720만8천542달러(한화 66억2천만 원)를, 아시아나항공은 187만 1천182달러(1억7천2천만 원)를 각각 지급했다.

연도별 영공 통과료는 대한항공의 경우 2002년 90만3천200달러, 2003년 100만5천790달러, 2004년 129만2천145달러, 2005년 184만4천425달러, 지난해 216만2천982달러였다.

아시아나항공은 2002년 10만7천710달러, 2003년 10만570달러, 2004년 28만8천831달러, 2005년 50만7천126달러, 지난해 86만16천945달러를 북측에 지급했다.

이들 항공사는 매월 북측 영공을 지나는 항공기의 영공 통과료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산하 국제정산소를 통해 북측에 지급하고 있으며, 평균 80만원 정도를 1회 비행 때마다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30대 기업 임원 10명 중 3명 'SKY' 출신

국내 30대 기업의 임원 10명 중 3명 가량은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잡코리아가 국내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종학력이 공개된 임원 2천226명 중 서울대 출신이 1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대학(11.7%), 고려대(8.8%), 연세대(7.1%), 한양대(6.5%), 성균관대(6.0%) 등의 순이었다.

해외대학을 제외한 단일 대학으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졸업한 임원의 비율이 29.5%에 달했다.

주요 기업별로 삼성전자는 해외대학(13.8%), 성균관대(9.9%), 한양대(8.1%), 서울대(7.7%), 경북대(7.3%) 등의 출신이 많았고, 현대자동차는 해외대학(11.6%), 서울대(11.0%), 고려대(8.8%), 연세대(8.35), 한양대(7.7%) 등의 졸업자가 다수를 이뤘다.

또한 SK㈜는 서울대(37.0%), 고려대(22.2%), 연세대(13.9%), 서강대(4.6%), 한양대(4.6%) 출신이, LG전자는 해외대학(26.7%), 부산대(13.1%), 서울대(12.0%), 연세대(8.4%), 고려대(6.8%) 출신이 각각 주류를 형성했다.

/연합뉴스

미래에셋이 무슨 주식 샀지?

5%이상 지분취득 종목 연초대비 100%이상 올라

올 들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5% 이상 지분을 취득했다고 신고한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운용사가 집중 투자한 중국 수혜주와 지주회사의 주가는 연초 대비 2~3배로 뛰어올라 눈길을 끈다.

그러나 증권업계의 '공풍'으로 급부상한 미래에셋이 고객들이 맡긴 풍부한 '실탄'을 일부 업종과 테마에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바람에 시장의 풀림 현상이 심화되고 단기 급등한 종목의 폭락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24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미래에셋이 5% 이상 지분을 취득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규

보고한 19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연초 이후 평균 115.2%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의 상승률 35.8%를 무려 79.4%포인트 웃돌았다.

두산(356%)과 SK(130%), 효성(146%), 삼성물산(151.9%) 등 지주회사 테마로 분류되는 종목의 수익률이 돋보였고 현대중공업(257%)과 LG화학(183%), SK케미칼(111.3%) 등 중국 수혜주의 상승률도 높았다.

미래에셋이 고수익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는 정도로 운용 자금 동원력이 뛰어난 점이 한 요인으로 꼽힌다.

미래에셋의 자본율이 가장 높은 종목은 태양광 에너지 테마주인 동양제철화학(15.64%)이며 그 다음은 서울반도체(15.38%), SK케미칼(15.06%), 효성(14.82%), 두산(14.79%), 소디프신소재(14.79%), 호 텔신라(14.26%) 순이다.

/연합뉴스

증권사 직원들이 불공정 주식거래

최근 3년 주가조작 가담 등 22개사서 29명 적발

최근 3년여 간 증권회사의 임·직원들과 상장사의 핵심 내부자가 연루된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히 주식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 증시 신뢰회복에 걸림돌인 불공정거래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솜방망이 자금 동원력이 뛰어난 점이 한 요인으로 꼽힌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과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07년 9월까지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적발된 증권사 임·직원은 모두 22개사, 29명

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2명이 검찰에 고발됐으며 나머지 혐의자들은 검찰 통보나 행정 조치를 받았다.

2005년 주가조작(12건)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4건)로 적발된 증권사와 임직원수는 각각 11개사, 16명이었으며 작년에도 5개 증권사 소속 8명의 직원들이 7건의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가 적발됐다.

올 들어서도 5개 증권사 소속 5명의 임·직원들이 주가조작(3건)과 미공개정보이용(2건)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돼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실례로 상장사 A기업의 주식 공개매수 사무를 취급하던 B증권 기업 인수.합병(M&A) 담당 실무자인

김 모씨는 A기업의 미공개정보인 '공개매수' 사실을 고교 동창생의 형에게 미리 알려줘 부당이득을 취득하도록 도와준 뒤 이익 일부를 받아 챙겼다.

또 C증권 지점 과장인 이모씨는 작전세력의 상장사 인수와 주가조작 행위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씨는 차명계좌를 제공해주고 이 작전세력으로부터 휴대전화로 매매주문을 받아 자신이 근무하는 지점의 영업단말기를 통해 매매주문을 내는 수법을 썼다.

아울러 같은 기간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당국의 조처를 받은 기업의 내부자(회사 포함)들은 모두 248명이었으며 이 중 주요주주(대주주)와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의 핵심 내부자가 199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코스피 80P 널뛰기

변동성 극심...투자주의보

장중 2,000선을 뚫고 이를째 순항하던 코스피지수가 오후 들어 급락세로 돌변, 수직 하락했다.

2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4.62포인트(0.75%) 내린 1,933.36에 마감됐다. 코스닥지수도 7.21포인트(0.91%) 하락한 781.79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애플홀가'에 힘입어 지난 주말 급락 이후 이를 연속 상승한 영향을 받아 18.57포인트(0.95%) 오른 1,966.55로 출발한 뒤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점차 늘렸다.

오전 11시께 2,003.20까지 오르며 2,000선을 넘봤던 지수는 오후 1시40분께부터 흔들리다가 오후 2시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1,923.27까지 떨어지며 지수는 무려 80포인트에 달하는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지수의 수직하락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이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 급증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상가상으로 장중 중국 위안화 절상설, 메릴린치 실적 우려, 유가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지수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했다.

대우증권 조재훈 투자분석부장은 "당분간 2,000 돌파 시도를 하면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이라며 "변동성이 큰 장세인 만큼 추가 급등락에 일회일비하는 매매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